

“정체성과 인물론 사이 선택의 어려움 많았다”



논설위원이 간다
지방선거 속으로

정후식
논설실장

경선 여론조사의 한계

당내 경선은 끝났다. 6·13 지방선거에 출전할 더불어민주당의 광주시장과 전남 지사 후보 선출이 지난주 마무리됐다. 광주시장 후보에는 지난 2010년과 2014년에 이어 세 번째 도전에 나선 이용섭 전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확정됐다. 이 후보는 1차 경선에서 과반인 52.94%를 얻어 강기정 후보(32.22%)와 양형자 후보(14.85%)를 따돌렸다. 전남 지사 경선에선 결선 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1.92%를 얻어 장만채 후보(38.08%)를 제치고 후보로 선출됐다.

광주시장 경선은 애초 일곱 명의 후보가 나서 치열한 경쟁을 벌인 점을 고려하면 다소 싱거웠다는 평가다. 이 후보가 과거 공천 불복과 탈당 경력으로 10% 페널티를 적용받았고, 후보 단일화와 현직 시장의 불출마 이슈까지 겹친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민주당이 역동적인 경선과 지방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결선 투표는 해보지도 못했다.

무엇보다 일반 국민과 권리당원 여론조사

광주 시장 경선에 많은 유권자들 고민 토로 응답률 저조 흥행 실패 ‘그들만의 리그’ 전략 당비 내는 권리당원 대상 조사도 과반 못 미쳐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시·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국민 여론조사의 경우 투표율(응답률)이 4~5%대에 그쳐 기대했던 흥행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광주시장 경선의 국민 여론조사에는 6만 명 가운데 5.41%인 3200여 명만 응답했다. 결선 투표가 치러진 전남지사 경선의 국민 여론조사에는 6만 명 중 2566명만 참여했다. 투표율은 4.27%로 광주보다 더 저조했다.

권리당원 여론조사에도 광주시장 경선에는 4만3381명 중 1만8567명이 참여해 42.08%, 전남 지사 경선 결선 투표에는 5만7000명 중 2만6204명이 응답해 45.97%의 투표율을 각각 기록했다. 매월 당비를 내는 충성도 높은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임에도 과반에도 못 미친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광주시장 경선의 경우, 광주시 유권자 113만8000여 명 중 1.9%(2만1800여 명)만 참여했고, 전남 지사 경선에는 154만9440명 중 1.8%(2만8770명)가 참여해 후보를 선출한 셈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 ‘경선이 곧 본선’으로 여겨지던 광주·전남 지역 투표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그만큼 경선 과정이 지역민의 주목을 끌지 못한 채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는 방증이다. 일각에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까닭

이기도 하다.

국민 여론조사는 자동 응답 시스템(ARS, Automatic Response Service) 방식의 조사가 한계로 꼽힌다. 일반적으로 ARS 여론조사 응답률은 5% 안팎으로 전화 면접보다 크게 낮아 조사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통화가 연결되면 그냥 끊어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응답자의 정치 관심도에 영향을 받으며 여론의 대표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많다. 최근 ‘드루킹 특검 도입’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가 야당이 반발하며 응답률이 10%에 미치지 못하면 여론조사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입법을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선진국에서도 여론 왜곡 우려 때문에 ARS 여론조사를 기피한다고 한다.

정치권에서도 정당의 국민 경선인단을 여론조사로 대체하는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여론조사는 투표 행위가 아니며 평등선거 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도,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참고용으로 진행되는 여론조사를 결정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민 참여 경선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민과 당원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경선 방식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편으로 전두환 정권 당시 청와대 비서실 근무와 당원 명부 유출 등 각종 논란 속에서

치러진 민주당의 광주시장 경선 결과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중에 하나는 광주시장의 정체성 문제다. 우리는 그동안 광주시장만큼은 정체성이 분명한 인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줄곧 강조해 왔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후보의 정체성과 인물론 사이에서 고민이 많았다고 토로한다. “정체성을 따지지 않으니 인물론 미치지 못하는 듯하고 인물을 보지 않으니 정체성이 부족한 듯해서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이다.

‘적폐 청산’이 화두로 떠오르고 촛불 혁명 이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민주화의 성지라는 광주에서 어떤 후보를 선출해야 하는가에 대한 유권자들의 고민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민주당 경선의 서울시장 후보(박원순 현 시장)와 경기 지사 후보(이재명 전 성남시장)가 모두 시민운동가 출신들로 채워진 터에 광주에서는 어떤 인물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시민들의 고민이 깊었을 것이다.

선거는 이제 다시 시작이다. 지방 선거를 50여 일 앞두고 이뤄진 이번 민주당의 시·도지사 후보 확정도 과거에 비해 빠른 편이다. 2010년과 2014년에는 선거 한 달 전에야 결정됐다. 현재 지지율이 계속된다면 민주당 후보들의 우세가 점쳐지지만 드루킹 댓글 사건과 연이은 성추문 의혹, 남북정상회담 등 대형 이슈가 정국을 흔들고 있다. 선거일까지 시간이 남아 변수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야권에서 지역 민심에 부응하는 후보의 정체성에 걸맞은 후보를 발굴해 내세울 경우, 선택을 위한 유권자들의 고민은 투표장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될 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하다.

광주·전남 ‘정치인 펀드’ 왜 사라졌나

당원 중심 경선... 투명한 집행 번거로워

전국의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이 선거 자금을 모으기 위해 앞다퉈 ‘정치인 펀드’를 출시하고 있는데 어찌 된 일인지 광주·전남 선거판에서는 ‘정치인 펀드’를 찾아 보기 힘들어졌다. ‘정치인 펀드’는 선거 자금을 시민에게 빌려 쓰고, 선거가 끝나면 되돌려 주는 형식이다.

26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지방선거 예비후보 중 강수훈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청장 예비후보만이 유일하게 정치인 펀드를 최근 출시했을 뿐 다른 후보의 정치인 펀드는 찾아볼 수 없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과 경기도 등지의 입지자들이 선거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펀드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정치인 펀드는 선거가 끝난 후 보전을 통해 투자금에 이자까지 더해 갚는다는 점에서 투자자와 정치인 모두에게 도움을 준다. 또 펀드 모금을 통해 후보자를 홍보할 수 있고 펀드 가입자들의 보이지 않는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도 매력 중 하나다. 무엇보다도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선거자금을 모을 수 있어 ‘깨끗한 선거’를 지르는 좋은 방법이다.

지역 한 정당 관계자는 “수도권 등지에서는 정당 간 경쟁이 치열해 홍보 효과가 있는 정치인 펀드가 자주 등장한다”면서 “하지만, 광주·전남은 민주당 당원 중심으로 경선이 치러지다 보니 대부분 당원 확보에 집중하고 모금과 사용, 상환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정치인 펀드를 개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신인과 청년의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50~100%를 보전해 주는 기준이 되는 10~15%의 득표율을 올리기가 힘든 점도 정치인 펀드를 꺼리는 이유로 분석된다. 정해진 득표율을 올리지 못하면 선거비용을 보전 받지 못해 정치인 펀드 상환도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한편, 유일하게 정치인 펀드를 개설한 강수훈 동구청장 예비후보는 출시 하루만인 지난 25일 목표금액 3500만원을 모두 모았다. 강수훈 후보는 “펀드를 통해 당수에 선거자금 모금에 성공해 어려움을 해결했고, 후보는 물론 충성도가 높은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효과도 특출하게 거뒀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솔라시도 구성지구 자율주행차 기반 구축 시동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뉴질랜드 자율주행 셔틀업체와 협약

솔라시도(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J 프로젝트)가 ‘스마트 시티’로 가는 첫걸음을 뒀다. ICT(정보통신기술)·AI(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차동차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동을 건 것이다.

26일 전남도와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부에 따르면 솔라시도 구성지구 특수목적법인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부는 지난 25일 뉴질랜드의 자율주행 셔틀업체 오미오 오토메이션사(Ohmio Automation Ltd)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해남 구성지구 634만평 부지에 조성 중인 스마트시티 솔라시도는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에너지 자족이 가능한 탄소제로 도시다.

이 곳에는 AI(인공지능)·ICT(정보통신기술)를 토대로 한 자율주행차 인프라 등 신교통시스

템을 통해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한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솔라시도에 자율주행차 공급은 물론 자율주행 플랫폼, 총면적 5000㎡의 생산공장 연구시설 등을 구축한다.

자율주행기술을 보유한 업체와 생산시설 및 연구소를 유치하는 내용의 업무협약 체결은 국내에서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미오는 전남도의 우수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또 향후 아·태지역 수출로 연결, 지속 가능한 산업을 솔라시도 구성지구에서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부와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윤진보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사장은 “오미오와의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자율주행셔틀을 활용한 교통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자율주행과 관련한 신산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말했다.



윤진보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사장과 모하메드 혁멧 오미오 오토메이션 회장이 솔라시도 구성지구 자율주행차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제공>

한편, 오미오 오토메이션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ITS(지능형 교통 시스템)와 자율주행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HMI Global’의 자회사로 자율주행셔틀 사업을 위해 2017년에 설립된 회사다.

오미오는 2017년 말 크라이스트처치, 시드니, 멜버른에서 시범운행을 진행했으며, 올 하반기에 자율주행셔틀 상용화 모델을 세계 4번째로 생산할 예정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AI 한숨 돌렸지만...

전남도, 다음달까지 방역태세 유지

전남도는 26일부터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 위기 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떨어졌지만 당분간 현재 방역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위기 경보가 ‘중위’단계로 조정되더라도 특별 방역대책 기간인 5월 말까지는 시·군, 동물위생시험소 등과 함께 27개 AI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 방역점검, 빈 축사 환경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어야만 입식을 승인하는 오리 입식승인제도 유지한다.

전남도는 AI가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이번에 발생한 7개 시·군에는 거점소독시설을 운영한다. 5월말까지 전체 오리농장에 대해 일제검사를 해 잔존했을 수 있는 바이러스를 확인하기로 했다.

김상현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과거 발생 시기를 고려하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며 “축산농가에서는 매일 1회 이상 소독을 하고 축산차량 통제 등 농장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12월 10일 영암 씨오리 농장을 시작으로 5개 시·군에서 11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40 농가 가금류 81만 2000 마리가 살처분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왕인문화축제

2018 함께 오세요! 氣의고장 영암으로!

영암 방문의날

왕인문화축제부터 월출산 국화축제까지
사계절 관광객 여러분을 氣의고장 영암으로 초청합니다

Namdo Sports
전라남도체육대회

4년연속 국가축제 지정

왕인문화축제

2백만 도민 화합과 전진

제57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지상 최대 항공 레저소

제5회 항공레저스포츠제전

국립공원 지정 30주년

호남의 소금강 월출산

후원

문화체육관광부